

자문·용역비 17억 출처 논란...공정한 협상도 의문

수면위 떠오른 제2순환도로 '부적절 계약'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협상 과정에서 뒷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숨지면서 광주시와 맥쿼리간 제2순환도로 사업재구조화 협상도 주목받고 있다. 이 협상은 광주시가 해마다 맥쿼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소송과 함께 진행됐고, 이 과정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가 불합리한 협상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정 부담 줄이기 위해 재협상=제2순환도로는 크게 4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2구간(소태IC~학운IC)을 제외한 3개 구간은 애초 건설 비용을 부담한 기업에게 광주시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MRG)해 주는 방식을 적용, 비용을 보존해줬다. MRG는 계약 당시 추정된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이 적어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광주시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1구간(두암IC~소태IC)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2041억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민간사업자인 맥쿼리 측과 합의해 MRG를 폐지했다. 대신, 협상을 통해 1구간에서 벌어들인 돈이 실제로 맥쿼리가 쓴 비용에 못미치면 이를 광주시가 보존해주는 투자비보존방식(대안적 MCC)으로 전환했다.

◇무엇이 문제인가=경찰은 이 협상을 진행한 자문·용역 비용 일부가 전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협상을 위한 자문과 용역 등을 맡은 업체에 지급된 비용 17억원도 맥쿼리 측이 부담해 "맥쿼리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12년 맥쿼리와 재협상을 한 대구시의 경우 주주를 교체한

광주시 재협상 결과

대구보다 1000억 더 부담 시 "맥쿼리에 불리" 해명

뒤 비용을 지원해주는 비용보존방식(MCC)으로 바뀌 2010억원을 절감했지만 광주시는 주주 교체없이 실제 비용을 지원 하는 대안적 MCC 방법을 선택해 1014억원 절감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대구에 비해 손해는 없다"=광주시는 자문·용역비 맥쿼리 측 부담 등 협상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경실시협약 제49조'에 따라 재협상을 위한 용역비 등을 맥쿼리 측에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업체에 유리한 용역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맥쿼리 측과 비슷한 재판을 진행했던 부산과 대구 등의 소송이 패소하면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재협상이 필요했다"면서 "자문과 용역을 진행한 업체는 국내에서 맥쿼리와 협상을 진행한 유일한 업체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 결과가 대구시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경우 재정절감액을 산출하면서 물가상승 비율을 3% 산정했고, 광주시는 1.3%를 산정했기 때문이다"면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물가상승 비율을 3%로 올려 다시 계산하면 재정절감액은 1014억원(물가상승 1.3%)가 아닌 1996억원이다"고 덧붙였다.

◇관련 공무원 추가 수사, 맥쿼리 재협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협상을 담당했던 전 공무원이 숨지면서 광주시와 맥쿼리간 제2순환도로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소태IC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상도=경찰은 최근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광주시청 관련 공무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관련자가 사망하는 등 사안이 큰 만큼, 경찰의 추가 수사도 예상된다.

또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3-1구간(호덕IC~풍암터지)의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이후 MRG 방식에 따라 3-1구간의 비용 보전을 위해 699억원을 맥쿼리 등에 지급했고, 이 금액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어 이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임종석 386 대표 차세대주자 떠올라

靑 비서실장 역대급 활약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맡아

호남서 차기 대선주자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종석(사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역대급' 활약을 보이면서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에서는 장흥 출신의 임종석 실장이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차세대 주자가 되지 않느냐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임 실장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을 맡아 방대한 선거 조직을 무난하게 진두지휘, 정권 창출의 핵심 역할을 했다. 당시 호남 민심의 저변에 깔려있던 반 문재인 정서가 완화된 배경에는 서울과 광주를 분주히 오갔던 임 실장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는 평이다.

정권 출범 이후에도 임 실장의 역량이 돋보였다. 헌정사 초유의 조기 대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할 수 없어 내각 등 인적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임 실장이 청와대 참모진의 중심을 잡고 혼선의 최소화를 이뤄냈다. 여기에 정권 초반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빈틈없이 보좌한 것은 물론 장미꽃을 들고 추미에 민주당 대표를 찾는 등 특유의 친화력으로 정권의 핵심인 당-정-청

또 대북 특사단 파견과 관련, 임 실장은 직접 나서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철저한 준비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장에 임명된 임 실장은 성공적인 회담 개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문을 열어 가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실질적인 386 세대 정치인 가운데 대표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물러하면서 여권 내에서 임 실장만큼 안정감과 친화력이 있는 차세대 주자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의 성공 개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화된다면 임 실장의 정치적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호남에서도 임 실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본인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로 임 실장이 지속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 같은 호남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 실장은 정치권의 과도한 평가에 극도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 임 실장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역위원장 지각 사퇴 김영록 前 장관

예외조항 적용 당무위서 구제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을 사퇴하고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직 사퇴 시한을 지키지 못해 당내 공천 신청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민주당과 전남지역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 당규 56조 6항은 '지역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때 공천 신청은 무효가 된다고 당규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이 이번에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하려 했다면 2월13일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이날 현재까지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 결정을 미리 내리지 못해 지역위원장직 사퇴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 당규 규정대로라면 김 전 장관은 공천 신청 자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56조 6항의 말단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

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당규 56조 6항은 지역위원장 직위를 이용, 경선 준비를 유리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 준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무위 의결을 거쳐 공천 신청자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천 신청자격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 관계자는 "56조 6항 예외 규정의 필요에 따라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 등을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이에 해당하지 않아 당규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즉, 전남도가 협치가 아닌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전략공천을 받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의 경우를 예외 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당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